제23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7월 24일(금) 14시

○ 장 소 :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공동회장단교 /29개교, 전체교 /41개교

연번	학교	직위	참석자
1		상임회장	오홍식
2	국교련	사무총장	김경호
3		전문위원	함주현
4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철원
5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한수
6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 만
7		부의장	김성룡
8		부의장	조광수
9	- 경상대학교 교수회 -	회장	백승철
10		부회장	윤석주
11			
12		사무국장	이정민
13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	회장	한명숙
14		부회장	조혜영
15		총무	손재천
16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유석호
17	광주교육대	회장	방기혁
18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상임부의장	원명수
19		사무국장	조혜영
20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21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헌종
22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회	회장	황홍섭
23	사으고하기스테하고 그스편이한	의장	신윤호
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김재수
25	나오마하고 고스청이성	회장	조철원
26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이사	임정묵
27	-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홍균
28		부의장	오시영

29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상준
30		의장	김도형
31	전남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김근중
32		연구원	정재우
33	전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창헌
34		부회장	이인재
35		부회장	소은선
36		사무처장	임익태
37		정책처장	제갈윤석
38	제주대학교 교수회	사무처장	최수석
39		특별위원회	박병욱
40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회	회장	강홍재
41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42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승복
43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44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덕
45	한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호택
46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종률
47		사무총장	김현욱
48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철원
49		부회장	한철희
50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구
51		부회장	이상일
52	한밭대학교 교수회	회장	임경빈
53	국교조 정책위원	정책위원	남중웅
54		정책위원	김대중
55		정책위원	권오현
56		정책위원	김재수

I. 제23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 성원보고 : 전체 41교 중에서 29개교가 출석하였음
- 상임회장 인사말
- 군산대학교 박병선 총장 축사
- 의장소개

Ⅱ. 보고 및 논의사항

보고사항 1. 국교조 경과보고

- 자료집 27p 참조.

-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개정이 되었으며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음
- 2020년 6월 24일 금오공대에서 지회설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7월 14일 경상대학 대학 정책 포럼에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28p 참조, 지난 5월 20일 노동부가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5월 20일 법이 통과되는 동시에 노동부가 해당 법안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교조가 법에 노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합법화 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28p 2-1을 참고하면 대학 교원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퇴직한 교 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짐
-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으로는 2-2 대학교원 노조 정치 활동 금지조항, 2-3 교섭대상 및 사용자 측 당사자 문제 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국교련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지정하려 지속적으로 거론 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상이 된다면 예산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등이 교섭대상자로 지목될 것임
- 경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업종별 위원회에서 국공립 대학 위원회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국립대학의 합리적인 교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됨
- 거론된 사안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법률개정 등 관련된 각종 활동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임
- -국교조가 교섭을 할 때 지회에 관한 사항에서 지회는 본교의 위임, 총장은 교육부장의 위임을 받아야만 대학 개별 사안을 교섭할 수 있음
- 국교련 소속대학의 국교련 지회 설립 및 회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현재 4개교가 설립이 되어있으나 2학기때 기회설립의 의사를 타진한 학교가 여러 곳 있음
- 각 대학에서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국교조와 관련된 노동자 설명회를 요청하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이며 설립과 관련된 법적 매뉴얼이 필요할 시 메일로 배포할 예정임
- 현재 국교조의 자문위원, 정책위원장인 건호연 경상대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조에서는 정부와 교섭, 지회에서는 대학본부와 교섭을 할 수 있음
- 교섭대상은 교육정책 근로조건 경제적 사회지위 향상 등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용자 측을 교육부와 총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장관 등으로 확장시키고자 함
- -따라서 국교련에서는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으며 각 대학의 상황에 대한 안을 국교련측으로 전달하면 취합하여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으나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각 대학에서 수렴하길 바람
- -아울러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하여 총장이 금기해야 할 행동에 대한 사 항도 취합하여 교섭에 활용하고자 함
- 현재 국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고육부, 노동부와 대응을 하고 있음
- 지난 경상대에서 정책포럼 시 고용노동부에 필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각 대학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수렴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의하여 각 대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취합하여 진행할 예정임

- 질문을 전체적인 수렴을 하기 이전에 총장 독임제와 같은 공통이 문제들은 즉각 건의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됨
- 가시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는 총장 독임제 같은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의제를 국교련 사무국으로 전달할 시 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한 후 지회설립 매뉴얼을 상임회장에게 전달하겠음
- -모든 국교련 회원회는 교수회,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교수노조 등 업무 권한이 상이하여 교수노조가 단일화되지 않는 이상 복수노조가 허용될 것으로 여겨지며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일된목소리로 무언가를 제시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2019년 단위지부가 대학에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들었으며 임원, 회장들이 국교조에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것으로 전달받음
- 그러나 2020년 5월에 전달받은 내용은 달랐으며 국교자라는 노동조합이 교수들 사이에서 이미 공론화 되었고 그 조직의 연원이 국교련에서 탄생하였으면 더 많은 지부가 탄생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옳다고 사료됨
- 또한 지부가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효율적 접근이 부족하므로 노조가 생 겼을 때 실제로 교수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와 같은 것들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함
- 의장들이 계속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사안 들도 이전 회장단 회의 때 합의가 되어 결정된 사항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준수가 되어야 함
- 교무회의 혹은 학무회의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교수들의 의견이 번복 되어 뒤집어질 경우도 있기에 국교련 차원에서 창원대학교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법을 논의하여 논점을 넣어서 총장에게 공문을 전달하겠음

논의사항 1.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한 의견

- 임주영 연구소장의 국립대학법과 관련이 있음
- 현재 고등교육은 사회적인 대학교육의 의미, 헌법에 나오는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교육 연구자료로서 접근이 아닌 대학을 중점으로 재산권을 주장하여 대학 평의원회 구성 문제, 개방형 이사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정작 중시되어야 할 교수님들의 참여율이 부진하게 되었으며 고등교육법에 전가되었음
- 이런 부분들은 국공립대학의 평의원회 제도,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 제도 등에 있어 교수의 학문적 역할, 교육자의 역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짐
- 자료집 44p 참조, 공권력,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학문의 주체는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대학과 교육부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됨

- 자료집 45p 참조, 대학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자료집 46p 참조, 대학의 공공성의 운영에 있어 대학의 의사결정권은 교수, 교원들이 과반수 이상 점유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자료집 48p 참조,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선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대학 내 사무국장 등의 일방적 독주를견제하고 교수 및 학생 중심의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논의사항 2. 강사법 시행 1주년 점검

- 자료집 49p 참조, 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강사'를 추가하였으나 강사, 교수들의 관점에서 강사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자료집 51p 참조, 강사는 학문, 연구, 교수와 관련된 측면에서 학문적 동반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어디까지나 학문 후속세대의 관점 또는 학생과 교수를 이어주는 학문적 중간구조의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강사는 여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다중 교원이면서 비상근직이며 대학강의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대학과의 관련성과 책임성이 약한 만큼이를 고려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 대학 행정, 교인비 수령 등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논의사항 3. 대학총장 선거 관련 쟁점

- -보도자료에 기인하여 2016년 7월 26일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이루어짐
- -교육부 공문에 따라서 교원, 직원, 재학생을 '수'를 합산하여 교원이 80%를 넘지 못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 동의함
-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선출방식에는 외부위원보다는 직원, 학생의 비중을 높이도 록 하였음
- 대학공문에서는 대학구성원 참여제의 자율성의 취지보다는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도 록 의도한 것으로 사료됨.
- 자료집 58p 참조,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확대(안)에서 외부인사 비율을 늘릴 것으로 여겨짐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개선 방향 중 대학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단일화하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대학총장 선거제 안착을 위해서 학생의 경우도 교육수요자라는 입장을 감안하여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총장선거 반영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 2020년 7월 15일 3차 결선에서 직원이 12.5에서 14로 늘어났으며, 조교는 0, 학생은 0에서 2로 조정되었음
- 국교련에서는 전임교원이 중심으로 하되 대학강사의 보조적 입장,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여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충북대학교 정책위원 김대중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의사결정 시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며 총장선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총추위 참여비율과 대학평의원의 비율을 혼선해서 발표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음
- -총장 직접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 때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으나 총장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여 검찰에서 법을 적용할 때는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
- 각 대학의 자료는 그대로 자료집에 그대로 넣었기에 자료수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후 에 결과집에 수록할 예정임
- 정책위원 워크숍 계획, 국교련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러한 절 차를 밟겠음
- 대학평의원회 구성, 총추위 구성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학교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선정하여 총정선거 기간에 시간강사, 무기계약직분들이 선거위 비율을 늘려달라고 애기 할 것임
- -총장선거를 하기 전 국교련 차원에서 혹은 각 대학차원에서 기존 선거위 비율에 관하여 세대차이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음
-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자문·심의가 들어오기에 총장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총장 선거는 교수가 하되, 학생과 직원, 시간강사의 비 의사권 행사 등 원칙을 세워서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국교련측에서 원칙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전체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유함
- 교수들에게 확인된 다수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를 밟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평의원, 총추위 등 민주적으로 접근하면 바람직할 것을 여겨지나 직원들 사이에서 도지지 성향이 달라 갈등, 반목, 진영 분리가 형성되고 있음
- 총장선거(직선제)를 치루고 나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아졌으며 총장선거 시 직원들이 가지게 될 힘이 두려움(왜 직원들이 왜 그만큼의 비율이 들어가야하는가?, 그 정당성은 바람직한 모습인가?, 대학문화 풍토조성에 기여 가능한가? 등)외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
- 총장선거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선출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본인들 의사에 반하면 개편 자체를 무산시키고 해산하는 경우가 있음
- 정책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거나 규정 내 합의를 거쳐야 함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합의라는 단어의 모호성이 문제제기를 번복시킬 수 있어 협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총추위를 사퇴하였을 때 사퇴한 총추위원들을 다시 뽑을 수 있는 방법, 교직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 등을 사전에 모색하여 방안 등을 대비하여야이후 총장 선출 시 규정 등에 얽메이지 않을 것이며 국교련에서는 협상과정에 필요한

전략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여겨짐

- 정책위원회 토론회 자료가 일정 부분 구축되었을 때 국교련 차원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

논의사항 4. 지방 국공립 무상교욱 실현화 방안

- 자료집 106p 참고
-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며 국교련의 전·현직 회장단들이 참여 중에 있음
- 2019년부터 국교련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민주당 측에서 해당 안을 담당하고 있음
- 토론회의 주된 목적은 지역균등 발전, 공공성 확보 등 임
- 토론회를 통해 지방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전체 국공립대학을 선정, 국가지원 확 재정의 운용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자료집은 공주대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완성 후 토론회 자료집까지 구축되면 각 대학의 교수회로 전달하도록 하겠음
- 현재 국공립 대학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교련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여 공동 성명서 또는 국교련의 공동의견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토론회 때 자료를 전달하여 국교련측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음

논의사항 10. 기타논의

- 105p 참조,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님 5주기 추모행사가 17일 예정이었으나 임시공휴일 지정 예정에 따라서 13일로 앞당겨서 진행할 예정임.
- 108p 참조,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안내 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가능한 참석을 요청 바람
- 질의 : 일부 지역은 각 지역 대학들끼리 간담회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8월 공식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나 호남, 제주권에서는 8월 중 제주·호남회의를 진행할 예정

<회의사진>







